

대한 모태펀드 의무출자 규정도 폐지한다.

정부는 창업법과 벤처법으로 이원화된 벤처펀드 관련 제도를 일원화하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 ■ 中企 기술 훔치면 최대 10배 배상...대기업 기술탈취 근절 대책 마련

정부는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대책을 발표하고 법 개정을 통해 기업 간 기술자료 요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기술 비밀자료를 거래할 시에는 비밀 유지협약서(NDA)를 의무적으로 체결해 이를 위반하면 벌칙을 부과할 방침이다. 하도급거래에서 예외적으로 기술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사유도 최소화하고 기술 요구서에 반환·폐기 일자를 명시해서 기술탈취를 방지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의 기술자료를 신뢰성 있는 전문기관에 보관해 기술 유출을 방지하는 '기술임치제'도 활성화한다. 기술자료 거래기록 등록 시스템을 구축해 대기업과 기술자료 거래내용, 자료를 요구한 대기업 담당자, 부당하다고 느낀 정황, 불합리한 상황 등을 기록해 분쟁 발생 시 입증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앞으로 기술탈취 관련 소송이 있을 때 가해 혐의를 받는 대기업도 기술 침해 사실이 없음을 입증하도록 책임을 부여하는 제도를 특허법, 부정경쟁방지법, 상생협력법, 산업 기술보호법 등에 도입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피해기업에만 입증 책임이 있어서 소송 장기화, 비용 증가 등으로 피해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됐다.

아울러 기술탈취 관련 하도급법, 특허법 등 5개 법률의 손해배상액을 손해액의 최대 10배까지 올리는 등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기술탈취 사건 관련 행정부처의 조사 및 수사 권한도 강화할 방침이다. 검·경 등 수사기관뿐 아니라 중기부, 공정위, 특허청 등 관련 부처가 협력해 피해사건을 신속하게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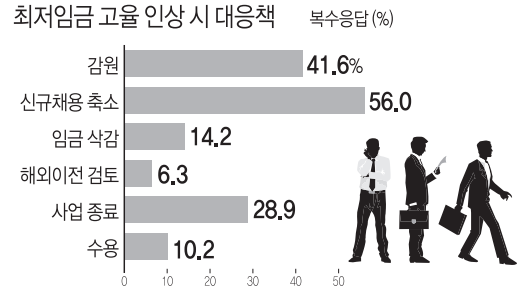
### ■ 최저임금 인상·근로시간 단축, 중소기업 경영 부담 커져

문 대통령의 공약인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정책이 가시화하면서 중소기업계의 우려가 커졌다. 원칙적으로 소득 주도 성장의 취지에 공감하고 장시간 근로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지만, 급격한 정책 추진은 부작용을 낳는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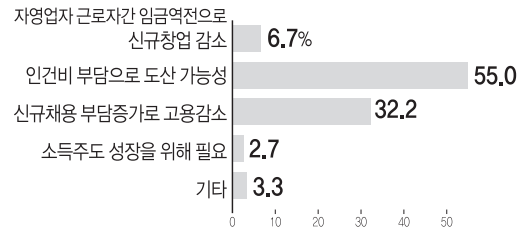
정부가 예고한 2018년 시간당 최저임금은 7천530원으로 2017년 대비 16.4% 오른 수준이다. 최저임금은 상용근로자뿐만 아니라 임시직·일용직·시간제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 고용 형태나 국적과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업계는 시간당 최저임금이 16.4% 오르면서 중소기업이 2018년 부담해야 할 인건비가 2017년보다 15조2천여억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중소기업계는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상여금, 숙식비 등 고정성 임금을 산

### 중소기업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의견조사 결과 2017년 6월 중소기업 332개 업체 대상 조사



###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인상 시 의견



자료/ 중소기업중앙회



입 범위에 넣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업계는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근로시간 단축'이 현실화하면 가뜩이나 심한 인력난이 악화할 것이라고 걱정하고 있다.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부족인력은 16만 명으로 전체 기업 부족분의 55%에 달한다. 도금, 도장, 열처리 등 뿌리산업과 지방사업장 등에서는 구인 공고를 내도 직원 채용이 어려운 실정이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기업 규모별로 300인 미만 중소기업의 근로시간 단축 비용 부담이 8조6천억원으로, 전체(12조1천억원)의 약 70%에 이를 전망이다. 세부적으로는 1~29인 영세 사업장에서 3조3천억원, 30~299인 사업장에서 5조3천억원이 더 필요하다.

업계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어려움을 겪게 될 중소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들에게 보조금이나 사회보험료 감면 같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정부와 국회가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노동제도 유연화에 대한 논의도 함께 진행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 세계 동향

### ■ 개요

2017년 세계는 세계 경제의 전반적인 호조에 힘입어 경영실적은 대체로 개선됐으나 미국·중국의 통상 압박, 새 정부의 재벌개혁 정책,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관련 검찰 수사 등 잇단 대내외 악재로 혹독한 한 해를 보냈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을 비롯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근로시간 단축, 통상임금 확대, 법인세율 인상 등이 이어지면서 대기업을 중심으로 경영환경 악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경제단체 가운데서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해체를 우려할 정도로 위기를 겪었고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도 여권과 껄끄러운 관계를 보인 가운데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가 '재계 대표'로 떠올랐다.

삼성그룹은 글로벌 반도체의 슈퍼호황 덕분에 사상 최고 실적을 올렸으나 이근희 회장의 오랜 외병,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 '그룹 컨트롤타워'인 미래전략실 해체 등으로 '시련의 한 해'를 보냈다. 현대차그룹은 중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을 비롯해 원·달러 환율 하락, 통상임금 1심 패스 등의 악재가 이어지면서 8년 만에 최악의 성적표를 냈다.

'재벌 저승사자'로 불린 김상조 위원장 취임 이후 공정거래 위원회가 잇단 재벌개혁 정책을 내놓자 재계는 불안에 떨었다.

## ■ 대한상의 '부상'…전경련 '추락'

대한상의는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미국 등 주요 순방 일정에 동참한 경제사절단 구성을 주도하고 문 대통령과 재계 총수들과의 첫 청와대 회동을 추진하는 등 '재계 대표'를 자임하고 나섰다.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이 12월 8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를 방문해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를 비롯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최중구 금융위원장 등을 잇따라 초청해 기업 최고경영자(CEO)들과의 간담회를 주선하기도 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과 민주노총 출신의 문성현 노사정위원장,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등도 잇따라 대한상의를 찾아 노동 현안을 놓고 머리를 맞댔다.

반면 과거 재계를 대표해 목소리를 냈던 전경련과 경총은 '적폐세력'으로 찍혀 현 정부의 대화 파트너에서 사실상 배제됐다. 전경련은 존립 자체가 위태로운 상황까지 몰렸다. '최순실 게이트' 사건에 연루돼 여론의 질타를 받으면서 임직원 수는 2016년 말 215명에서 1년 사이 110명 정도로 40% 넘게 줄었다. 삼성·포스코·현대차·SK·LG 등 주요 그룹이 잇따라 탈퇴하면서 회원사 수가 600여 개에서 400개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국내 유일의 전국 단위 사용자단체인 경총도 통상임금, 최

저임금, 정규직 전환, 근로시간 단축 등 굵직한 현안이 쏟아져도 공개적으로 재계 입장을 담은 보고서를 내놓지 못했다. 이슈에 대한 성명이나 코멘트도 최소한으로 자제했다.

회장이 사용자 측 위촉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가 개최한 '전국 일자리위원회 워크숍'에도 초청받지 못하는 등 새 정부 출범 이후 노사 관계·일자리 협의 과정에서 철저히 배제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 ■ 삼성, 총수 부재 장기화…연말 세대교체 인사

2017년 3월 미래전략실 해체로 사실상 계열사 자율경영 체제로 전환한 삼성그룹은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슈퍼호황에 힘입어 사상 최고 실적을 낸 삼성전자를 필두로 전반적으로 좋은 경영 성적표를 써냈다.

삼성전자는 2017년 매출액 239조5천800억원과 영업이익 53조6천500억원, 당기순이익 42조1천800억원의 실적을 올리면서 '창립 80년' 역사에서 최고 실적을 기록했다.

시설투자에 총 43조4천억원을 집행했으며, 특히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에 각각 27조3천억원과 13조5천억원을 투입해 '초격차 전략'을 강화했다. 배당 확대와 자사주 매입·소각 등 대규모 주주 친화적 정책도 내놨다.

삼성전자는 연말 임원 인사에서 비교적 큰 폭의 세대교체 인사를 단행했다. 권오현·윤부근·신종균 등 3인의 대표이사가 물러나고 새로 임명된 김기남·김현석·고동진 대표이사 시장단의 평균 연령은 57세로, 전임자들(63.3세)보다 여섯 살가량 낮아졌다.

한편, 삼성은 2월 미래전략실 해체 등 경영쇄신안을 발표한 뒤 삼성전자 등 전자계열사, 삼성물산 등 비(非)전자 제조 계열사, 삼성생명 등 금융 계열사 등 3개 소그룹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자율경영을 강화했다.

그룹 미전실을 이끌었던 최지성 실장(부회장), 장충기 차장(사장)을 비롯해 김중종 전략팀장, 정현호 인사팀장, 성열우 법무팀장, 임영빈 금융일류화팀장, 박학규 진단팀장, 이수형 기획팀장, 이준 커뮤니케이션팀장 등이 모두 사임했다.

여전히 이근희 회장을 총수로 하는 대규모 기업집단의 지위를 유지한 것은 물론 삼성전자를 '만형'격으로 계열사 간 소통도 이뤄졌지만 과거에 있었던 그룹 사장단의 '수요 회의'가 없어지고 그룹 단위의 대관 업무도 중단하는 등 경영상 연결고리는 대부분 사라졌다.

계열사 조직 개편에서 삼성전자 사업지원 TF와 삼성물산 EPC 경쟁력강화 TF, 삼성생명의 금융 경쟁력 제고 TF가 각각 구성되면서 소그룹 체제가 본격화했다.

## ■ '사드 충격' 현대차, 8년 만에 최악 성적표

국내 대표 완성차 업체 현대·기아자동차는 2017년 중국의 사드 보복, 원화 강세, 통상임금 1심 패스 등의 영향으로 8년래 최악의 성적표를 받았다.

현대차는 영업이익이 4조5천747억원으로 2016년보다 11.9% 줄어 들었을 뿐만 아니라 국제회계기준(IFRS) 적용이 의무화된 2010년 이후 가장 적었다. 기아차도 영업이익이 6천622억원으로

로 2016년보다 73%나 급감해 2010년 이후 가장 적었다.

기아차는 '통상임금'이라는 폭탄까지 맞았다. 8월 말 통상임금 소송 1심에서 패한 뒤 패소가 확정될 경우를 대비해 소급 지급할 급여 등 약 1조원을 3분기에 손실 예상 비용(충당금)으로 처리했다.

업계 일각에서는 현대차그룹의 부진이 사드 등에 따른 일시적 문제가 아니라, 중국 브랜드 부상 등으로 한국 자동차의 글로벌 경쟁력 자체가 떨어진 것 아니냐는 지적을 내놨다. 해마다 연중행사로 반복되는 지루한 노사 협상과 파업에 따른 생산 차질도 풀어야 할 과제로 지목됐다.

이런 가운데 현대차는 12월 창립 50돌을 맞았다. 50년간 고군분투하며 세계적 자동차기업으로 입지를 다진 현대차는 자동차 산업의 미래인 친환경·자율주행차 기술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향후 50년 준비에 나섰다.

현대차그룹은 2025년까지 38가지가 넘는 친환경차 모델을 출시해 친환경차부문에서 세계 2위(판매량)에 오른다는 목표를 내놨다. 자율주행 기술부문에서도 2020년까지 고도 자율주행차, 2030년까지 '완전 자율주행차'를 상용화하기로 했다.

현대차그룹은 2017년 말 정기 임원 인사를 통해 310명을 승진시켰다. 임원 승진 규모는 2016년 348명보다 38명(10.9%) 줄었을 뿐만 아니라, 2011년도(309명 임원 승진) 이후 7년 만에 가장 적은 것이다.

정기 인사는 미래 기술 우위를 위한 연구개발부문 승진자 확대, 미래 환경변화 대응 차원의 기획·관리부문 우대, 중장기적 관점의 리더 후보군 육성, 지속적 외부 우수 인재 영입 등에 초점을 맞춰 이뤄졌다. 실제로 연구개발(R&D)·기술분야 승진자는 모두 137명으로 2016년 133명보다 늘었고, 전체 부사장 승진자 15명 가운데 현대디자인센터장 루크 동커볼케 부사장 등 8명이 R&D·기술분야에서 배출됐다. 아울러 차세대 리더를 육성하는 차원에서 전체 승진 축소 기조에도 불구하고 부사장 승진 임원은 2016년 11명에서 2017년 15명으로 36% 늘었다.

## ■ 롯데 '암운'··SK·LG '순항'

롯데는 2017년에 창립 50주년을 맞았지만 이를 제대로 자축하기 어려운 위기 상황이 이어졌다.

신동빈 회장이 화산돈 황령과 배임 등 혐의로 징역 10년의 중형을 구형받고 롯데마트는 사드 보복의 표적이 되면서 중국 사업 철수를 결정해야 했다. 신 회장은 이와 별개로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에도 연루돼 법정에 섰다. 중국에서 112개(슈퍼마켓 13개 포함) 점포를 운영 중이던 롯데마트는 집요한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현지 매장의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해 지자 결국 사업 철수를 결정했다.

SK그룹은 세계적 낸드플래시 업체인 일본 도시바의 메모리 반도체 사업부 지분 인수와 최태원 회장의 '공유 인프라'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조가 눈에 띄었다.

도시바 메모리는 우여곡절 끝에 SK하이닉스가 참여한 베인 캐피털 컨소시엄이 인수에 성공했다. 오래전부터 사회적 기업에 관심을 기울여온 최태원 회장은 '공유 인프라'란 화두로 주목을 받았다. 새 정부가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강조하는 가운데 최 회장이 이런 정책 기조에 부응하는 기업의 사회적 역

할론을 제기한 것이다. 최 회장이 제시한 공유 인프라란 유·무형의 기업 자산을 협력업체,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 사회적 기업 등과 나눠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말한다.

LG그룹은 경영 외적 부분에선 대체로 조용한 가운데 계열사들의 실적이 크게 신장됐다. 11월 구본무 LG그룹 회장을 비롯한 개인 대주주들이 보유하고 있던 LG상사 지분을 지주회사인 (주)LG가 매입해 이 회사를 지주회사 체제 안으로 편입시켰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주회사로 전환한 일부 재벌이 개인 대주주의 지분이 높은 계열사를 지주회사에 편입시키지 않은 채 놔두고 있다고 지적하자 주요 대기업 중 가장 먼저 조치에 나선 것이다. 또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대기업 중 첫 방문 기업으로 지목해 찾아가 자리에서 "협력업체 상생에서 모범이 되는 기업"이라는 칭찬을 듣기도 했다.

## ■ 공정위 '재벌개혁' 기치에 대기업 울상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취임 이후 각종 재벌개혁 정책과 대기업 제재 방침 등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대기업들이 울상을 지었다.

공정위는 친척이 경영하는 회사를 계열사 명단에서 제외하고 지분 현황을 실제 소유주가 아닌 차명으로 신고한 의혹을 받는 부영그룹 이종근 회장을 6월 검찰에 고발한 것을 시작으로 대대적인 재벌 비리 의혹 규명 및 부당 관행 해소에 나섰다.



▲ 9월 2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남동일 기업집단 과장이 대기업집단 내부거래현황 분석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7월 하림그룹의 내부거래 자료에서 부당 지원 행위가 의심되는 정황을 파악하고 직권조사에 나섰다. 8월 중소·소상공인의 공정한 경쟁 기회 보장을 위해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대기업과 거래하도록 하는 행위인 대기업의 전속거래 구속행위를 금지하는 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9월 대림코퍼레이션 등 대림그룹에 대한 부당내부거래 및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일감 몰아주기) 혐의와 관련해 현장 조사에 나섰다. 10월 네이버 모바일 광고의 위법 여부에 대해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11월 사회 공헌이라는 간판을 걸고 재벌 총수의 지배력 확대에 우회적으로 동원된다는 비판을 받는 대기업 공익재단을 전수 조사하겠다고 계획을 내놨다.

공정위는 대기업 조사를 전담하는 기업집단국 등을 신설하면서 인력을 60명이나 늘렸다. 재벌개혁과 골목상권 보호 역할 등을 천명하면서 예산도 이례적으로 큰 폭으로 늘렸다.